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3월 | ESG공시 및 정책

2026 March | vol.159

Brief

1	국내 지속가능공시는 ISSB 정합성을 기반으로 단계적 도입 추진. 2028년부터 연결자산 30 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공시 의무 확대 예정
2	네스테(Neste)사례는 ESRS 기반 ESG 공시체계 구축과 지속가능 원료 조달·Scope3 관리 등 공급망 중심 리스크 관리 전략 제시
3	ESG 공시가 재무·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기업 데이터 관리, 내부통제 및 AI 활용 등 공시 대응 역량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
4	해외부패 규제의 역외 적용 강화 흐름: 중국 해외부패방지법 추진, 미국 FCPA 공소시효 연장 논의 등 글로벌 사업 기업의 통합 준법 대응 중요성 증가
5	국내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 방해 행위 제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6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 채용·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확대될 전망

목차

국내 지속가능성공시 로드맵 및 기준

1 윤리 체크리스트

- 1) 금융위원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2026.2.25)
- 2)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2026.2.26)

2 사례 돋보기

ESG 경영 실천 사례

네스테 (Neste)

3 윤리, 지금

권익위 동향

-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등 부정청탁 금지
- 학술지 「권익」 제 3 권 논문 공모
- 2025년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 선정

국내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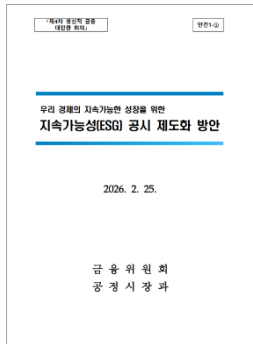
- 中,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추진...초국경 부패 단속 강화
- 미 상원의원, 해외 뇌물 사건 공소시효 연장 법안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공시기준·로드맵 이달 말 발표
- ESG 공시 재무·리스크 영역 편입...금융사 SI 도입 본격화

4 윤리 네컷

ESG 경영과 투명한 거버넌스

5 행사

국내 지속가능성공시 로드맵 및 기준





- 1) 금융위원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2026.2.25)
- 2)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2026.2.26)


- 금융위원회는 ISSB 기준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로드맵 제시
- 공시제도 도입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대상 공시시작, 2029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2026년 2월 26일 국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최종 공시기준 의결

국내 ESG 공시 로드맵 초안 주요 내용

공시 도입 일정

2026년  의견수렴 및 공시기준 정비

2028년  의무공시 시작
(연결자산 3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2029년  의무공시 확대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2031년  스코프3 공시 적용
의무공시 기업 전체 대상

제도 운영 방향

 **공시기준**
IFRS 기준을 기반으로 제정.
국내 산업 특수성 반영해 일부 기준 완화

 **공시채널**
거래소 공시(안착 후 법정공시 전환)

이행지원

- ① 스코프3 등 자율공시 기업에 공시 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②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파일럿 테스트 운영, 교육 등 공시이행 지원
- ③ 관계부처 합동 스코프 3 관련 산정/추정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공시 도입 대비 점검사항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제 4 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로드맵 의견수렴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로드맵 초안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시작하고, 이후 2029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공시 시행 첫 해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서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10% 미만) 국내외 종속회사(자회사 등)의 경우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의견수렴안을 2026년 3월 말까지 검토한 후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제도 시행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6년 2월 2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기준은 국제 기준인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와의 구조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 1 호 일반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공시 대상 정보의 범위, 중요성 판단, 보고기간 및 비교정보 제시 방식, 재무정보와의 연결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거버넌스(Governance), 전략(Strateg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의 네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독 구조, 조직 내 책임 체계, 내부통제 및 성과관리 연계 여부 등 기업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항목에는 반부패, 이해충돌 관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윤리경영 기능과 관련된 관리 체계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시 요구에 따라 기업은 향후 공시 확대에 대비하여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준비 수준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른쪽의 체크리스트는 금융위원회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연결자산 기준과 국제 규제 동향(EU CSRD 등)을 참고하여 기업 규모별 공시 준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속가능공시 대응 체크포인트>

기업규모	점검사항
대형 상장기업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공시 의무 적용 예상 기업)	<input type="checkbox"/> 이사회 또는 ESG위원회가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공시 대응을 위한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종속회사 및 해외사업장의 ESG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스코프3 배출량 산정 또는 추정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견기업 (공시 확대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ESG 관련 KPI가 경영진 평가 또는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ESG 또는 준법 총괄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주요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ESG 관련 관리지표 또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중소·협력 사 기업 (공급망 대응 또는 자율공시 기업)	<input type="checkbox"/> ESG 데이터 기록 및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주요 협력사의 ESG 요구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동강령 및 기본 윤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ESG 또는 준법 담당 역할이 조직 내 지정되어 있는가
자율공시 기업)	<input type="checkbox"/> 고객사의 ESG 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주요 리스크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기록 절차가 있는가

참고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2026.2.25\)](#)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2026.2.26\)](#)

[한국경제, "2028년 첫발..ESG 공시, 코스피 30조 이상부터](#)

[의무화"\(2026.02.25\)](#)

ESG 경영 실천 사례

사례기업: 네스테(Neste)

핵심 키워드: #ESG 공시, #ESRS, #지속가능 원료조달 및 활용

- EU 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기준에 따른 이중중대성 평가 및 ESG 공시체계 고도화
- 재생연료 확대, 원료 추적성 확보, Scope 3 관리 등 환경·공급망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 비즈니스 윤리 기반 거버넌스 체계와 국제 프레임워크 정합성을 함께 제시하여 공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강화

ESG경영 실천 사례 - 네스테(Neste)

세계 최대 재생항공유(SAF) 공급 기업 | 핀란드

#ESG공시 #ESRS #지속가능 원료조달 및 활용

공시체계 고도화

- ESRS 기반 이중중대성 평가
- CSRD 및 ESRS 준수
- SASB 석유·가스 기준 병행

환경·공급망 관리

- 재생연료 확대 전략
- 폐기물 및 잔여 원료 활용
- Scope 3 배출 관리
- 원료 추적성 확보

거버넌스 체계

- 행동강령 및 준법체계
- 반부패 리스크 관리
- 내부고발 채널 운영
- UN Global Compact 준수

ESRS 거버넌스 영역 주요 공시 사항
ESRS 2 GOV-1: 경영기구의 역할
ESRS 2 IRO-1: 리스크·기회 식별 프로세스
ESRS G1-1: 기업문화 및 비즈니스 행동 정책
ESRS G1-2: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네스테(Neste)

네스테(Neste)는 핀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재생항공유(SAF) 공급 기업으로 재생디젤 등 바이오 기반 연료를 생산하며 에너지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네스테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 공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이에 따른 유럽 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네스테는 2024년에 ESRS 기준에 따른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실시하여 기업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적 리스크 및 기회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의 특성과 이해관계자 기대사항을 반영하여 보고 범위를 설정하고 주요 공시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산업 특화 공시 기준인 SASB 석유·가스 정제 및 마케팅 기준(Oil & Gas – Refining & Marketing Standard)을 병행 활용하여 연료 사업 특유의 ESG 리스크와 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 및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재생연료 확대 전략과 지속가능한 원료 조달을 중심으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폐기물 및 잔여 원료(waste and residues)를 활용한 재생연료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Scope 3)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원료의 지속가능성 인증과 추적성(traceability) 확보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ESG 공시 핵심 주제를 (Business Conduct) 기준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네스테는 지속가능 성명서(Sustainability statement)를 통해 ESRS 공시 요구사항과 설명된 위치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네스테 공시에 포함된 항목 중 거버넌스 영역을 살펴보자면 오른쪽 표와 같다.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준법 및 반부패 리스크 관리 체계, 내부고발 채널 운영, 윤리교육 등 비즈니스 윤리 관련 정책과 실행체계를 공시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정책 수준의 설명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구조와 운영 활동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준수 여부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네스테 공시사항-ESRS 요구사항 발췌>

기준(Standard)	공시 요구사항(Disclosure requirement)
ESRS 2 GOV-1	행정·감독 및 경영기구의 역할 (The role of the administrative, supervisory and management bodies)
ESRS 2 IRO-1	주요 영향·리스크·기회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설명 (Description of the processes to identify and assess material impacts, risks and opportunities)
ESRS G1-1	기업문화 및 비즈니스 행동 정책 (Corporate culture and business conduct policies)
ESRS G1-2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Management of relationships with suppliers)

[출처: [Neste, Sustainability statement](#)]

참고

[Neste, Sustainability statement](#)

[Neste, Annual Report 2025: Annual review](#)

권익위 동향

권익위 정책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 간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에서 보다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보호 기준을 상향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의 사전 보호조치 신청 허용 및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도입, 신고자 색출·신고 방해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과 부패신고자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3월 11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5835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등 부정청탁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청렴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민간 채용·협찬 요구 등 10 가지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와 가족 관련 업체 정보 제출 의무 도입,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 근거 마련 및 신고자 법률 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은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2월 13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4672

권익위 활동

학술지 「권익」 제3권 논문 공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 전문 학술지 「권익」 제3권(2026년호) 발간을 위해 5월 29일까지 논문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실천적 정책 대안과 국민권익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실무형 논문' 발굴에 중점을 둔다. 응모는 국민권익 관련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전문가·공무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제출 논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논문은 10월 말 발간 예정인 「권익」 제3권에 수록되며, 기획 논문 최대 250만 원, 일반 논문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3월 3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5454

2025년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민간 부문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기업으로 대화제약·정식품·노루홀딩스 등 3 곳을 유공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통해 민간의 부패 예방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들 기업은 경영진 주도 윤리체계 구축과 부패리스크 관리, 취약 분야 개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 예방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과 청렴윤리경영 평가·지원 제도화를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청렴 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전반의 반부패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과 국가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2월 26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05157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ESG

中,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추진...초국경 부패 단속 강화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등 초국경 부패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부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3월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해외 도피 범죄자와 자산 추적, 국제 협력 및 해외 사건 수사 관련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규율할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반부패 정책의 적용 범위를 국경 밖으로 확대해 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 연합뉴스 2026년 3월 10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49433?from=kakao>

미 상원의원, 해외 뇌물 사건 공소시효 연장 법안 추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해외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FCPA 강화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미 법무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일부 축소한 상황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법안은 반부패 법 집행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좌우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집행 기조 변화와 관계없이 반부패 준법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로이터(Reuters) 2026년 3월 9일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lawmakers-plan-dabwring-10-years-brig-bribery-cases-2026-03-09/>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공시기준·로드맵 이달 말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자발적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와 공급망 중심의 ESG 요구 증가에 따라 환경정보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환경정보 공개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공개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기준 마련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5개사이며, 신청 기업의 환경정보는 검증을 거쳐 연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3월 15일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Id=1849420>

ESG 공시 재무·리스크 영역 편입...금융사 AI 도입 본격화

ESG 공시가 재무·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금융사들의 AI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EY가 보험사·자산운용사·은행 등 금융회사 25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0%가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과정에 AI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 업무는 기존 지속가능성 전담팀에서 재무·리스크·컴플라이언스 조직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내부통제 체계도 재무 기준에 맞춰 정비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 통제와 지역 자율 실행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ESG 조직 규모는 기업 전략에 따라 확대와 효율화로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AI는 보고서 자동 작성, 규제 모니터링, 벤치마킹, 지식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데이터 품질과 거버넌스 체계 미비는 여전히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 임팩트온 2026년 3월 17일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dxno=18248>

ESG 경영과 투명한 거버넌스

윤리네컷

ESG 평가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점검해봅시다.

ESG 경영 추진 계획 검토

내부신고 접수 창구도 익명 보장 되도록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익명 신고가 많아지면... 우리 회사 문제 많은 회사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요...?!

신고건수

시간

ESG 평가에서는 신고 건수보다 내부 신고 제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속가능회계기준 (SASB)에서는 이런 항목을 확인하니 참고하세요.

공시 기준	관련 내용
SASB 지속가능 산업 분류체계 (상업은행)	내부고발자 정책과 신고 절차 설명
	내부 신고 채널 및 핫라인 운영 여부
	제3자 독립 신고 채널 운영 여부
	신고 방법 및 절차 공개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정책

그럼 신고가 늘어도 꼭 나쁜 신호로만 보는 건 아니겠네요?

ESG 관점에서는 투명한 회사라고 볼 수도 있죠.

참고: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SASB 지속가능성 회계기준-보험(번역본) (2022.12.28 번역)

SCCA 아시아-태평양 법률 총회 (SCCA APAC Legal Congress 2026)

싱가포르 사내 변호사 협회(SCCA, Singapore Corporate Counsel Association) 주최로 '법률 안락지대의 종말: 알고리즘 시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생존, 적합성, 그리고 재창조'를 주제로 하며, 아시아 지역의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다룬다.

- 주최: 싱가포르 사내 변호사 협회(SCCA, Singapore Corporate Counsel Association)
- 일정: 2026년 4월 8일(일) ~ 9일(월)
- 장소: 싱가포르, One Farrer 호텔
- 참고: <https://scca.glueup.com/event/asia-pacific-apac-legal-congress-2026-161421/>

제20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국가 ESG 우수기업 시상과 ESG확산 그림 공모전도 연계 행사로 진행된다.

- 주최: 한국언론인협회·고려대학교 ESG 연구원
- 일정: 2026년 5월 7일(목)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서울 중구 소재)
- 참고: <https://akj.or.kr/article/?cate=25&id=3830>

독자 의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3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로 개선하려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호에서 다룬 주제 또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 ②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 ③ 기타 의견(다뤘으면 하는 주제, 기업 사례 등)
- ④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

의견남기기 <https://quiz.assist.ac.kr>

2026년 4월 3일(금)까지

(1) ['의견남기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 국민권익위 문의 창구 개설 안내 ★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 후 답변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기프티콘 당첨자 안내

전○욱님, 김○남님, 김○웅님, 박○숙님, 박○비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 |
|----------|--------------------------|
| ① 상담신청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 ② 상담관지정 |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 ③ 사실관계조사 |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 ④ 결과확인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